



# ESCO사업의 성장엔진은 새로운 파이낸싱 기법과 자금원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지난** 해 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ESCO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입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에너지절약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성인 연구위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5년에 입사했다.

“ESCO사업은 9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정부의 정책자금지원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절약시책에 의해 나날이 발전해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좀더 확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자본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위원은 ESCO사업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검토했다. ESCO의 개념이 7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태동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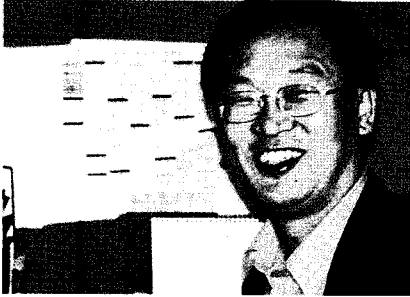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성과배분계약(Shared Savings contract)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 ESCOs는 주로 절약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을 채용하고 있다.

이 방식하에서는 ESCO가 절감량을 보장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을 알선하고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SCO는 프로젝트에 따라 민간 파이낸싱 또는 공공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파이낸싱이 연방 또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제지원이 있어 비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민간 파이낸싱의 경우 고객의 차입 또는 자기자본 투자형태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은행, 리스회사 등 제 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위원이 ESCO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정부의 자금지원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ESCO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자본의 유



경영학을 전공한 이성인 연구위원은 ESCO사업은 시설투자 자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진단, 행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 사업이라며 ESCO는 기본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사용기기의 판매, 설치가 아닌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거한 종합컨설팅, 포괄적인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와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ESCO사업은 등록업체들이 많아지고 단순 조명에서 벗어나 여러 영역으로 넓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라고 생각됩니다. ESCO들의 기술력도 높아지고 정책 자금의 지원도 늘고 있지만 이 역시 미약한 편입니다. ESCO 제도가 활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지원의 확대와 함께 ESCO의 자체자금 조달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한시바빠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ESCO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부채 비율이 상승한다는 점에 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기업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담보 신용대출 제도’와 ‘대출채권팩토링 제도’다. 하지만 이 역시 낙후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외면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보고 있다. 이 때 참여 주체는 ESCOs, 은행 및 금융기관, 에너지수용가, 에너지절약진단기관, 보험사 등이 된다.

### 실질적인 에너지 성과보장계약으로 그동안의 파이낸싱 도입이 ESCO사업 활성에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 하는 사업주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ESCO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이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말한다.

에너지가격 기능의 강화, 국내 ESCO업체의 진단 및 기술력 제고, ESCO의 자금조달능력 제고와 고객의 자금조달 역할 확대, 금융기관들의 물적 담보 관행 탈피, 대기업 ESCO의 부채비율 200% 원칙 예외 인정, 청정개발체제사업과 ESCO사업과의 연계가 그것.

특히 이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의 ESCO사업에 대한 무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생산업체, ESCO, 금융기관,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교류 확대 방안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ESCO들이 “고객이 자금조달을 부담하는 성과보장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금조달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선진국 ESCO들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한다면 ESCO사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유·무형의 가치는 매우 클 것”이라

고 전망했다.

대체적으로 연구원들의 퇴근 시간은 일정치 않다. 연구과제에 따라 때로는 밤샘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이성인 연구위원은 “아빠는 참 따뜻하고 상냥하다”는 딸의 말을 듣고 감격할 줄도 아는 어린 감성의 소유자이다.

지속적으로 ESCO사업을 관찰하면서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ESCO사업의 미래는 밝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